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6년 9월

“동북아 농업의 공동 발전 방안 다각적으로 모색”

제4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 국제심포지엄 9월 5일 개최



‘전환기 경제의 동북아 농업’이란 주제로 9월 5일 「동북아농정연구포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4회 「동북아농정연구포럼」 국제심포지엄이 9월 5일 롯데호텔월드 에메랄드룸에서 ‘전환기 경제의 동북아 농업’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의 농업과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북아시아 농업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도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양부 농업통상대사는 ‘농업적 상상력과 21세기 동북아시아 농학자들의 세대전’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제1세션은 ‘동북아시아의 최근 농업정책개혁’이란 주제로 친 푸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장 사회로 열렸다. 첫 발제자는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시아 잉 박사가 ‘중국의 현행 농지제도: 정립과 평가’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시아 박사는 “농지가 공업화와 도시화에 잠식되지 않도록 두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요시이 쿠니히사 박사가 ‘신 핵심농가 경영 안정화 제도에 대한 예비연구’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요시이 박사는 “올 6월에 제정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핵심농가 보조금법」에 의거 내년부터 핵심농가 경영 안정제도가 이행될 것”이라 밝혔다.

우리 연구원 박성재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농정의 최근 변화’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융자 확대는 안정생산과 농산물 품질의 안정성 증진, 유통효율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2세션은 ‘동북아 농업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시사점’이란 주제로 열려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코니시 코조 소장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발제자인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리우 샤오허 박사는 ‘한·중·일 3개국 역내교역에 관

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향후 ASEAN 국가들로 구성된 동아시아의 농산물무역정책모델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후쿠다 류이치 박사는 ‘협조적인 게임이론에 따른 FTA 분석’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 연구원 김윤식 부연구위원은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의 가격 동향을 예측·분석 결과를 밝혔다.

3세션은 ‘최근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새로운 이슈’라는 제목으로 우리 연구원 최정섭 원장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리시엔더 박사가 ‘중국의 신농촌 건설과 한·일 양국의 농촌발전경험이 주는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 요시다 타이지 박사는 ‘급등하는 국제 원유가격이 일본의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우리 연구원 이용선 연구위원은 ‘유가 급등이 시설원예 경영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은 농업정책 연구와 정보교류 및 학술활동 촉진을 위해 우리 연구원과 일본의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창설한 포럼이다. 매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일본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와 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의 연구자들이 참석해 전문적인 견해와 다양한 식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잃어버린 생명의 밥상을 찾아서’ 초청강연 개최



김인술 온생명평생교육원 회장을 9월 29일 초청해 건강 관련 강연을 들었다.

연구원은 9월 29일 대회의실에서 온생명평생교육원 김인술 회장을 초청, 월례 초청강연회를 가졌다.

특강에 앞서 최정섭 원장은 취임 1년을 맞아 “사람이 경쟁력이다”이라고 말씀을 열어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쟁력 있다는 것보다 연구원이 경쟁력 있다는 말을 듣자”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앞으로 변함없이 열린 마음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생명평생교육원 김인술 회장이 ‘잃어버린 생명의 밥상을 찾아서’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김 회장은 웰빙, 질병에 대해 정의하며 병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밝혔다. 병의 대책으로 음양오행(陰陽五行)이 조화된 식생활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생태적인 옷과 숨쉬는 집 등 주(住)생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건강을 위해서는 풍토가 합일된 생활을 바탕으로 안전한 식생활, 자연 친화적인 생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음양오행 자연식에 대해 설명했다.

새국토연구협의회 제2차 포럼 열어

새국토연구협의회(상임대표 최정섭 원장)는 9월 27일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에서 ‘함께 만드는,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이란 주제로 2차 포럼을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최 원장은 “화천에 이어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이란 주제로 청주에서 2차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어떤 쟁점이 부각될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이어 동국대 오충현 교수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만들기의 개념과 우리의 현실’이란 제목으로, 청주대 김태영 교수가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청주만들기’란 제목으로 발

표했다. 동아대 김승환 교수는 ‘부산 백만평 시민공원만들기 사업의 경험과 과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에 기초한 지역환경만들기’란 제목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박사와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박창석 박사가 함께 하는 환경만들기, 그 전략과 추진

방안’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희성 박사 사회로 토론을 하였다.

지원부서 팀장 워크숍 가져

연구원 지원부서 팀장 10명이 9월 23일과 24일 연구원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화천군 토고미마을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좋은 직장만들기 상상하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부서간 업무 협조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나눴다. 그리고 연말사업의 마무리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연구원 업무 관련 개선 방안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림바이오 기술 개발 토론회

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는 9월 20일 서울교육문화센터에서 농림바이오 육성 및 기술 개발 추진 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6 농림과학기술대전 성황리에 마쳐



2006 농림과학기술대전이 aT센터에서 열려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는 aT센터에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2006 농림과학기술대전을 개최, 2만 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농림과학기술대전은 9월 27일 개막식에 이어 제9회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 시상식이 있었다. 개발된 기술 및 기술 활용 부문에 대해 심사하여, 충남농업기술원 김태일 연구사가 딸기 신품종 개발로, 동아대 정영기 교수는 기능성 주류

개발로 각각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등, 총 23명이 농업과학기술상을 수상했다.

6개 주제로 나눠 우수기술 전시회도 가졌다. 전시관 중 친환경농업관은 농산업의 시대적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관심을 끌었다. 또한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초

지학회,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및 한국응용곤충학회 등에서 학술심포지엄도 개최하여 학술과 산업기술의 연계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농림과학기술대전에서는 기술 개발에서 사후관리, 특허출원·등록·관리, 기술보증 신용대출 등에 대해 농림기술관리센터와 특허청, 기술보증기금에서 전문가들이 나와 자문해 행사의 내실을 기했다.

‘멕시코 농업: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12년’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농업의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9월 15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9월 15일 중회의실에서 멕시코대학의 조지 다이어 교수를 초청, ‘멕시코 농업: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12년’이라는 주제로 KREI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이어 교수는 “NAFTA 체결 이후 급격한 제도개혁 추진으로 인하여 멕시코 농업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멕시코 농작물 중 과일, 채소류 등이 비교적 규모화 되었고, 자본력이 있는 일부 분야는 성장세를 보인 반면, 영세농 중심으로 재배되는 옥수수(Maize)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멕시코는 2008년의 완전 자유화를 목표로 농정 및 구조의 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농업부문의 각종 보조금도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멕시코 자유무역 도입과 함께 이루어진 농업지원프로그램의 제기로 농촌인구의 이농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멕시코의 NAFTA 체결 이후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발표와 토론은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농정의 방향을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일본 농정의 새로운 방향’ 세미나

연구원은 9월 14일 일본 명치학원대학의 고도 유시히사 교수를 초청, ‘일본 농정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로 중회의실에서 KREI세미나를 개최했다.

고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지규모의 영세성, 비효율적인 농지이용, 농지가격 결정 메커니즘, 과도한 농업보호정책, 시장변화에 대응한 농정의 부재, 농업인·농

협·정부·정치인 간의 비경제적·정치적 유착 관계 등을 일본 농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문제점을 토대로 일본의 새로운 농정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와 유사한 농업환경을 가진 일본의 농업문제를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한 고도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은 일본의 농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연구원 태동 39주년

연구원은 태동 39주년을 맞아 9월 8일 잔디마당에서 다과회를 가졌다.

우리 연구원의 전신인 농업경영연구소가 1967년 9월 8일 발족한 이래, 연구원

은 40여 년 동안 질과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날 행사는 연구원의 뿌리를 확인하고, 신입직원, 복직자 등 새로운 직원들과 얼굴을 익히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원장, 농업의 장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농업근대화 100년 심포지엄에서 발표



지난 8월 31일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한국 농업근대화 100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최정섭 원장은 ‘한국 농업의 장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최 원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농업은 경쟁력 있는 생명·첨단산업’, ‘농업인은 전문농·기업농에 의한 경영’, ‘농촌은 도시와 차별된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농업의 장기발전 정책 목표를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농공, 도농, 경향(京鄕)의 격차 해소에 두어야 할 것을 최 원장은 주장했다.

‘EU의 포도주 분야 개혁 논의 동향’ 논의



EU의 포도주산업 개혁 논의동향을 주제로 9월 11일 세미나를 가졌다.

연구원은 9월 11일 중회의실에서 ‘EU의 포도주 분야 개혁 논의동향’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김중철 농림부 농업협상과장은 “유럽의 포도주업계를 어렵게 하는 근본 원인은 내수 위축으로 재고가 쌓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EU가 포도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6월에 개혁안을 만들어

발표한 내용을 소개했다. 개혁안의 골자는 생산량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포도재배 농가의 구조조정 등으로, 값싼 포도주를 생산하는 농가를 겨냥한 대수술이어서 거센 반발과 진통이 있을 것

으로 전망했다.

김 과장은 EU 포도주 산업의 일반 현황과 생산, 소비, 교역을 비롯 개혁방안의 논의 동향을 발표했다. 더불어 향후 EU의 포도주산업이 특유의 타협과 절충으로 타협안이 만들어질지가 2007년 말까지 EU농정의 주요관심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제 발표 후에 EU 포도주 산업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전통식품 차별화를 위한 정책 · 마케팅 방향

이 계 임 연구위원

유난히 길고 더웠던 여름도 어김없이 가을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금새 수목을 단풍으로 물들일 것 같다.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의 두께가 선물전단지로 두꺼워지고, 매스컴에서 고속도로 상황을 예견하여 전달하는 등 이맘때 풍경은 크게 변화가 없으나 추석 상차림은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상차림에 며칠을 보내야 했으나, 김치와 한과는 물론이고 떡류와 식혜 등 대부분의 전통음식이 빠르게 상품화되어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식품소비행태의 간편성·합리성 추구경향에 따른 당연한 추세이며, 전통식품입장에서도 수요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전통식품 인증 및 지원정책 실효성 적어

실제 우리 전통식품은 경쟁재화에 밀려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최근 전통생활문화에 대한 재조명과 웰빙확산에 따라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식품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며 전통의 맛이 잊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류의 경우 상당수의 소비자가 전통적인 제조방식의 특징을 알지 못하고, 시식 후 공장식 장류가 더 맛있다고 응답하였다. 외식에서의 장맛에 익숙해져서 전통의 장맛이 잊혀져 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들 제품이 비위생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는 측면도 있다.

농림부에서는 1991년부터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생산기반 구축과 경영지원'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8월 서울지역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통식품인증마크(물레방아마크)에 대해서 잘안다고 대답

한 소비자는 3%에 불과했다. 농림부 지원업체중 상당수가 2000년 이후 지원이 중단되었고, 신규지원이 미미한 상황이다.

일부 업체, 소비자 선호 바탕으로 마케팅 성공

전통식품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이 정책이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업체지원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선호에 바탕을 두지 않은 문제점 해결차원의 지원정책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실제 전통식품업체 중에서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소비자의 기호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사제품의 차별화 마케팅 개척에 성공한 업체들이다.

A한과업체는 고품질 원료를 이용하여 전통한과의 맛을 한 단계 제고시키고 포장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명품화 전략을 추구하며, 일부제품에 대해 퓨전식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 업체는 제품 가격이 수입산의 4배 이상, 다른 전통식품의 2배까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매출신장을 이루어 전통한과업계에서 상위규모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B장류업체는 엄선된 원료 사용과 전통제조방식의 품질차별화를 통해 친환경매장에 판매망을 구축한 경우이다.

친환경매장에서는 친환경 원료농산물과 함께 고품질·기능성식품으로서 전통식품을 판매하고 있어 이들 매장은 틈새시장으로서 차별화된 경로가 될 수 있다. C김치업체는 국산원료를 100% 사용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인증을 받은 업체이면서 단체급식시장을 목표시장으로 하는 경우이다. 홍보비와 포장비를 줄이고, 가격을 낮춤으로써 학교급식과 같은 단체급식시장을 주판매처로 겨냥하고 있다. 김치기생충알사건이나 단체

식중독 등으로 상당수의 학교에서 HACCP 조건을 제시하는 등 단체급식시장의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당분간 이 업체의 경쟁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이 전통식품이 식품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차별화에 성공하느냐, 빠르게 축소될 것이냐의 주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통식품을 가정에서 직접 생산하는 소비자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40~50대 연령의 소비자조차 직접 담그기보다는 70대 이상 친인척에게서 조달하는 비중이 높아 앞으로 약 10년간 가정에서 생산하는 전통식품이 공장식장류로 빠르게 대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통식품을 통해 우수한 식문화 계승

전통식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전통식품의 대내외적인 홍보, 규제제정, 교육, 기술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통식품 범위와 정책대상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에게 전통식품을 알리고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식품업체 지원이나 업체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역개발 등과 연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체는 시장현황과 업체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전략을 개발하고, 대상 소비자층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체적인 마케팅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방송3사에서 고구려 관련 드라마가 동시에 방영되고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전통문화에 대한 잠재력이 재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은 맛뿐만 아니라 '식(食)=의(醫)'의 음식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몸을 보양하며, 영양학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통식품을 통해 우수한 한국의 식문화가 전승되고 해외에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



고령사회의 농촌 노인복지 개선대책

박 대 식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없을 정도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의 3.1%에서 2000년 7.2%, 2005년 9.3%로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14.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이와 같은 인구 고령화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970년에는 도시 2.1%, 농촌 4.2%이었는데, 2000년에는 도시 5.4%, 농촌 14.7%, 2005년에는 도시 7.2%, 농촌 18.6%로 나타났다. 즉, 농촌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가 도시에 비해서 20년 이상 앞서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다수의 농촌노인들은 자신들의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저축한 것도 별로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연금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은 농촌노인들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도시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농촌노인들의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첫째, 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정책에서 농촌노인들의 특성과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각종 위원회, 기획단 등을 구성함에 있어서 적정 수의 농촌노인문제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최근에 확정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농촌노인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노인복지예산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늘려 농촌노인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2005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방의회, 농민단체, 농협, 중앙정부 등에서 지자체의 노인복지사업을 감독·지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농촌노인 위한 복지예산을 크게 늘려야

셋째, 산재되어 살고 있는 농촌노인들에게 노인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읍·면사무소는 '주민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순회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노인 복지욕구 조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계획'도 농촌노인들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소득보장대책으로는, 먼저 국민연금이 농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노후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체계를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농어민 연금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는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농촌 주민들의 소득·재산·부채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환경 친화적인 '실버농업'을 장려하여 건강하고 영농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알맞는 작목, 농법 등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의료보장대책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농촌노인들에 대한 방문 진료 및 간호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을 내실 있게 확충해야 하며,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과 같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농촌주민들의 특성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농촌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지역에 노인수발 관련 복지시설들을 확충해야 하며, 보험료 부담 능력이 크게 부족한 농촌노인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복지전달체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여섯째, 주택보장대책으로는, 먼저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택을 지역사회에서 개발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노인들의 신체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보수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용 단독주택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의 노인들이 기존의 양로원 및 요양원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사회적 서비스대책으로는 농촌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확대와 경로당(노인정)의 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심야전기 또는 면세 유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경로당, 노인정 등의 시설을 소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만들어 이용률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줄여야 하며, 여가문화나 평생교육과 같은 관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R**

한·미 FTA 3차 협상 평가와 향후 전망

권 오 복 연구위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 2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3차 협상에서도 양측 의견이 맞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른 협상 분과도 대부분 비슷한 사정이지만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3차 협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협상 막바지에 시간에 쫓겨 많은 것을 다루어야 하는 국면에 빠질 수도 있다.

3차 협상까지 별다른 진전없어

6월초(6.4~9, 미국 워싱턴) 1차 협상에서는 협상의 기초 틀이 될 협정문 초안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주로 관세율 쿼터(Tariff Rate Quota: TRQ)와 농산물 세이프가드(Safeguard: SG) 등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양측의 이견만을 확인한 채 협상이 종결되었다.

7월 중순(7.10~14, 서울)에 열린 2차 협상에서도 양허안 골격(modality), 즉 관세 철폐 유형과 이행 기간에 대해 주로 협의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미국은 일반 상품은 물론 농산물까지도 10년 내 모든 관세를 철폐하지는 입장이었다.

3차 협상은 8월 중순에 양측이 교환한 양허안에 대한 배경 설명과 질의, 그리고 평가로 시작되었다. 미국측은 농산물에 관한 한 전 품목에 대해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겠다는 양허안을 제출하였다. 그렇지만 일반 상품까지 포함할 경우, 미국의 전체적인 양허비율은 88%에 그쳐 '예외 없는 포괄적 수준의 FTA 추진'을 표방해온 미국측의 당초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양허안을 작성하였다.

우리나라는 전체 상품 기준으로는 97%에 대해 양허계획을 제출했다. 다만 민감도가 높은 일부 농산물은 미정(undefined)으로 분류하여 일단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안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 측은 우리 측대로, 미국이

우리나라가 농산물 양허안을 보수적으로 작성할 것을 감안하여 섬유, 전자,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품목 양허안을 매우 보수적으로 작성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양허안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 후에는 미국이 사전에 준비한 개방요청사항을 논의했다. 미국측의 중요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는 다음 협상으로 미루고, 사료용 옥수수과 밀과 같이 민감도가 낮은 품목에 대한 개방요구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를 희망했다.

협상 초기에는 가급적 심각한 논쟁을 피하면서 개방의 효과가 큰 품목들을 위주로 다루어 실질적인 이득을 챙기고, 협상 막바지에 민감품목을 집중적으로 다루려는 미국의 계산된 협상 전략인 듯싶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협상전략은 오래가지 않아 압초에 부딪혔다.

미국측의 개방요구안에는 미국이 여러 차례 주장한대로 우리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 10년 내 관세철폐 요구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공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에 대해 미국 측이 양보할 의사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수정양허안을 기초로 4차 협상 열릴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협상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의의를 찾자면 첫째, 양측이 상대방의 양허안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방의 양허안에 대한 비난보다는 진전된 방향으로 논의를 집중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양측은 1차 양허안과 개방요청 사항을 수정하여 4차 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 측에게는 이번 3차 협상이 미국 측의 의도를 좀더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에도 보도된 대로 미국은 이미 상당정도로 수입이 개방된 사료용 옥

수수와 대두, 그리고 가공농산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셋째, 미국이 2차 협상 때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항 도입안에 대해 3차 협상에서는 조금은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점이다. 그동안 우리 협상단은 농산물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민감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우리가 양허안을 개선할 경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교한 협상 전략 마련해야

10월 23일부터 열릴 4차 협상을 앞두고 양측은 겉으로는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양측 모두 협상 준비에 분주할 것이다. 3차 때까지도 협상다운 협상이 별로 없었던 만큼 4차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 협상단이 3차 협상까지 미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파악한 이상 정교한 협상 전략을 준비해 우리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켜야 한다.

우리의 대미 농산물 수출이 소수 품목에 국한되어 있고, 미국이 이미 자국의 모든 농산물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농업분야만 놓고 볼 때 우리의 협상 무기는 별로 없다. 그렇더라도 무조건적인 수정 내지 양보보다는 조건부 양보 내지 수정이 필요하다.

가령 미국의 수출액이 많은 사료 곡물의 개방 요청 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대신, 중요 민감 품목의 개방을 미루거나 예외로 인정받는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품목의 양허 조건으로 세이프가드 조항을 도입한다는 부가 조건을 덧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협상에서 이익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분야의 양허를 타협 분야의 그것과 연계시키는 데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R**

브라질, 미국 면화정책을 WTO에 다시 제소

김태곤 연구위원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난 7월말 중단되자 브라질이 미국의 면화정책 개혁에 불만을 가지고 8월말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했다.

미국의 면화보조금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중서부 적도 부근의 부르카니파소, 베닌, 차드, 말리 등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부터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등 농업대국에 이르기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보조금이 세계 가격을 인하여 자국의 면화생산자에게 손실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브라질과 미국의 면화분쟁은 계속

브라질 정부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의 면화 생산액은 135억 달러이나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은 125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브라질은 이것이 다른 면화생산국에 손실을 끼친다고 해서 2003년 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하였다. 이에 WTO 패널은 2004년 9월 브라질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은 이 판결에 불복, 2004년 10월 상소하였으나, WTO 상급심은 2005년 3월 패널 주장대로 브라질 승소를 확정하였다.

미국의 국내 면화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수입대체보조금에, 그리고 수출업자에게 지불하는 보조금은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 또한 생산자에 대한 각종 가격지지, 부족불제도,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등의 보조금은 세계시장에서 면화가격을 하락시켜 관련 국가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 고정지불도 허용대상정책(green box) 요건을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본지 2003년 10월호, 2004년 6월호, 2005년 4월호 참조>

미국은 그동안 보조금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약속하는 한편, DDA 협상에서 보조금 감축에 대해 브라질과 협의해왔다. 그러나 브라질은 미국의 시정조치가 불충분하고 이행시기도 대폭 지체되고 있다고 판단, 미국의 조치가 충분한지 아닌지를 심리하는 '준수패널'(compliance panel) 설치를 WTO에 다시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1일 개최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브라질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미국의 반대활동으로 패널 설치가 연기되었다. 이에 브라질은 미국이 저지할 수 없는 요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일단 패널이 설치되면 90일 이내에 결론이 내려진다. 이것이 브라질·미국간 면화분쟁의 전말이다.

미국에서 면화는 정치력이 매우 높다. 그래서 보조금이 집중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에는 저항이 많다. 미국은 일부 보조금제도를 개선하였으나 판결대로는 준수하지 않았다. 면화를 포함한 미국의 국내 보조감축에 대해서는 DDA에서 시장접근 개선과 수출보조금 폐지 등과 함께 논의해왔다. 그러나 DDA가 중단됨

에 따라 협상 재개와 해결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 브라질이 WTO에 면화준수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수출국이다. 러시아, 인도, 중국 등과 형성하는 브릭스(BRICS) 4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농산물 수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풍부한 자원과 기술 개발, 인프라 정비 등을 바탕으로 대두를 비롯하여, 사탕, 오렌지피즙, 커피, 가금육, 소고기, 돼지고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수출경쟁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EU를 상대로는 사탕보조금을 제소하여 EU의 사탕정책 개혁을 얻어낸 바 있다. 미국의 면화 보조금제도의 개혁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농업법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기서 뜨거운 감자는 면화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감축 문제이다.

면화분쟁은 미국의 국내 농정개혁과 직접 관련된다. 미국은 WTO 패널이 결정한 '수출신용보증과 면화 스텝2 지불은 2005년 7월 1일까지 폐지하고', 또 '가격지지형 보조금은 그 마이너스 효과를 제거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든지,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안고 있다. 특히, '가격지지형 보조금의 폐지에 대해서는 면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맥, 대두, 옥수수, 쌀 등 다른 작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면화패널의 판정결과를 어떻게 준수하느냐는 이러한 관련 작물의 생산자나 협회도 주목하고 있다.

DDA 중단으로 브라질과 미국간 무역분쟁 확대

미국 농민단체는 '스텝2 지불' 이외는 정책 변경의 문제이다. 더구나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브라질의 공격 여하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 DDA가 중단됨에 따라 농업법 입법도 전략상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리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융자단가(loan rate) 인하'로 해결책을 찾는 의견도 있다. 융자단가를 대폭 인하하되, 고정지불을 인상하면 마케팅론이나 융자부족불 등과 같은 보조금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하여 관세면제특혜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은, 브라질, 인도, 러시아, 태국 등에 대해서는 이를 중단한다는 카드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브라질은 미국과 EU의 쌀과 유제품 보조금정책에 대해 제소한다는 다음 단계의 조치도 시사하고 있다. DDA 협상 중단이 오래 갈수록 세계는 분쟁의 소용돌이에 깊게 빠져갈 것이다. 동시에 브라질의 대미 공세는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미국의 보조금정책 개혁도 불가피해 질 것이다. **R**

농촌연구자문단회의와 확대기획조정위원회 개최

2007년도 연구사업에 대해 자문



지난 9월 22일 농민단체장을 초청해 2007년도 연구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2007년도 연구사업의 자문을 위해 연구원은 9월 22일 농민단체장들을 초청해 농촌연구자문단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최정섭 원장은 현장 농업인들이 원하는 연구에 대한 자문을 부탁했다. 이어 오내원 기획조정실장이 우리 연구원의 일반 현황과 올해 추진 중인 연구와 내년에 추진 계획인 연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한 농민단체장들은 한미FTA, 농촌사회 문제, 식량자급률, 남북농업협력, 농산물 소비, 식품안전제 신설,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에 대한 제안과 토론이 있었다.

확대기획조정위원회를 9월 27일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개최해 2007년 연구계획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확대기획조정위원회는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와의 연구원 기획조정위원회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농업·농촌의 비전 제시, 식품안전성 그리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한 심도 있고, 폭넓은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날 제시된 의견은 2007년도 연구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진 동정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9월 14일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남북통일 및 비상시 농업 분야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9월 22일은 통일교육원에서 국가기관 국과장급 및 공기업 간

부를 대상으로 '북한의 농업'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9월 28일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서 '농업통상 및 한미FTA'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은 9월 28일 비료공업협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비료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영훈 연구위원은 9월 13일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북한농업 현황과 남북 농업협력 방향'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김창길 연구위원은 9월 15일 동국대 강당에서 열린 생태환경연구소 에코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전략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민국 연구위원은 9월 22일 부산 벡

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에서 '무균돼지 바이오 장기의 잠재 수요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우병준 전문연구원은 9월 22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에서 '친환경축산직물제도의 경제적 영향분석'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원 인사

△(신규임용) 선임관리원 강학원(농림기술관리센터), 전문연구원 김성훈(농산업경제연구센터), 3급관리원 원동환(기획조정실), 주형돈(행정실)

△(전보)연구위원 김병률, 전문연구원 국승용(농산업경제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이대섭(농업관측정보센터), 전문연구원 조영수, 허주녕(농업구조연구센터), 전문연구원 황운재(국제농업연구센터)

연구원 내방객

△멕시코 잘리스코주 농촌진흥장관 일행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했다. 그들은 정기환 선임연구위원을 만나 농촌개발 관련 의견을 듣고 양국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호주의 피터 유일 농림수산부 차관보가 9월 29일 연구원을 방문했다. 중회의실에서 '호주의 농정개혁 경험과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토론했다.

국방대학원생 연구원 방문



에서 농업의 변화, 시장개방과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FTA 추진과 영향'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추진

해 온 한미 FTA 진행상황, 그에 따른 농업부문의 파급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FTA 추진 이후 변화된 우리 농업의 모습,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가 차원의 득실,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질의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정섭 원장은 대학원생들의 연구원 방문을 환영하며, 국가경제의 발전과정

에서 농업의 변화, 시장개방과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FTA 추진과 영향'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추진

해 온 한미 FTA 진행상황, 그에 따른 농업부문의 파급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FTA 추진 이후 변화된 우리 농업의 모습,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가 차원의 득실,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질의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